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나서

워크숍 개최 27개 기업 비즈니스 모델 검토·멘토링 검증... 5000만원 이내 시장진입 비용 지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전북특구본부)가 14일(목)부터 이틀간 전북특구내 27개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특구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연구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약 6주간 교육과 기업별 진단을 실시, 이번 워크숍은 그 마지막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교육 및 기업진단을 통해 도출된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 검토와 멘토링 검증을 실시했다.

참여기업은 자사의 주요 사업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등 기업 성공전략에 대해 멘토단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가온우드 문명철 대표는 "창업 초기기업으로서 기술사업화뿐 아니라 경영전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 초기 결립률에 대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북특구본부는 이번 교육 및 기업진단을 완료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이내 IP전략 수립, 시제품제작, 제품 인증 등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원해 역량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에 '일자리 추경' 협력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기업과 노동계, 언론계와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도 절실하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일자리 희망포럼'에서 "지난주에는 11조2,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시가 급하다. 일자리를 애타게 찾는 분들께 하루빨리 희망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신고도 개통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인사드립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조직혁신 등을 언급했다.

역량강화 사업의 신청은 23일 오후 3시까지 전북특구본부에서 접수하며, 선정평가를 통해 7월중 지원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총 2차

레 진행되며, 오는 9월까지 2017년 신규 연구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전북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들에게 특구의 단

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지원하여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연구소기업 제도가 기술사업화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개발청, 7월 전북 기업 우대기준 마련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완료... 전북 기업 참여 확대 기대

새만금개발청은 7월 중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특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한 관계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 협의를 완료했다.

새만금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과 수시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의실현(시뮬레이션)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 참여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17일 대한건설협회 도회 회장단과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논의 간담회를 했다.

새만금개발청 김형렬 차장은 "우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토대로 이르면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은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건설협회가 협력해서 지역 기업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시행령 72조)에 따른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과 계약

예규 개정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재검토 촉구'에 강력 반발

부안 피해대책위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친 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재검토 촉구해 해상풍력 유지 찬성 부안 피해대책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안 서남해 해상풍력 유치를 찬성하는 부안피해대책위(위원장 한산수)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희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4일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 유치를 찬성하는 부안 피해위(회원 1,000여명) 대표위원들은 지난 17일 부안지역 일부 일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공식 사과 및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상풍력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부안 위도와 고창 사이 연안 한 가운데에 실증단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과 바다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며 부안·고창 피해위와 함께 강력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착수됐으며 '서남해 해상풍력'은 총 10조원 이상 투입해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전북 부안군과 위도 남동쪽 해상에 ▲실증 ▲시범 ▲확산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약 2.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새만금개발청, AIB와 다각적 협력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15일 부터 18일 까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에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병국 청장은 진리권 AIB 총재, 경제부총리, 제주도지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 70여 개국 장 차관급 및 주한 외교사절단,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적인 개발사업자들에게 새만금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국 청장은 AIB 총재 및 고위급과의 대화를 통해 기간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올 하반기에 AIB 투자 전문가의 새만금 초청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의 베이징 본부 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도시를 만

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사업인 만큼 AIB와의 협력은 필수"라면서, "AIB 협력 강화 및 내년도 인도 문바이 제3차 AIB 연차총회에도 참가해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병국 청장은 네덜란드, 핀란드,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등 주요 외교사절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세계적 개발사 관계자, 국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고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G-20이 지원하는 국제투자 정보기관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 허브(GIIF)와 협력해 새만금 개발과 투자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정보사이트인 '파이프라인(Pipeline)'에 소개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0일까지 추가 접수

전주시는 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3차 추가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문화 및 학습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며, 카드를 이용해 스포츠, 레저용품, 의류기기 및 용품점, 수영장, 요가, 영화관, 공연장, 서점(인터넷서점), 화원, 펜션(민박), 미용실,

화장품, 안경점 등 27개 업종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에서 만 65세인 여성농업인과 만 20세 이상에서 만 24세기혼 여성농업인이다.

시는 신청인의 거주 지역, 전업농 및 타 법령 유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후, 7월 24일부터 생생카드를 추가 발급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